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외고 문제와 광주교육이 나아갈 길



김왕복

외고 신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지역과는 달리 중앙에서는 기존 외고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외고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등장하는 교육정책의 핵심 의제다. 본래 외고는 1974년의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비판과 영재교육 강화 명분 아래 1984년 최초로 도입되었...

광주 외고 문제는 장휘국 교육감의 뜻대로 철회되는 것으로 결론 난 것 같다. 1차적인 감독권과 행·재정 지원 권한을 갖는 교육감의 뜻을 교육과학기술부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외고 사태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되새김 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교육자치 원리 입장에서 보면 광주외고 사태는 아주 못마땅하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 대다수가 외고 설립 문제를 다음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교과부에 승인 신청을 강행한 전 교육감의 행위는 독선에 가깝다.

현 교육감의 외고 설립 승인 신청 작금 철회도 행정의 미숙함이 물씬 풍겨지는 대목이다. 특목고 지정·심의위원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조급하게 안건을 올려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결정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정책의 혼선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고 신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지역과는 달리 중앙에서는 기존 외고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외고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등장하는 교육정책의 핵심 의제다. 본래 외고는 1974년의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비판과 영재교육 강화 명분 아래 1984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고 졸업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지고 입시 경쟁률이 치열해지자 초등 3, 4학년

부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외고 폐지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최근 여론의 외고 개혁론은 친 서민 정책과 역행하는 사교육비의 감축이 주목표이지만 장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특목고보다는 혁신학교를 지향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교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성적 경쟁을 지양하고 협동 교육과 토론회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를 지칭한다.

이제 장 교육감은 외고 문제는 중앙에 맡기고 앞으로 지역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고 유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교육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한 여론 조사에서 70%의 시민들이 외고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 외고가 없어 매년 400여 명의 우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마디로 보편교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이 민심이다. 시민들의 민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 주어야 한다.

삼삼 이견회 회장은 '천재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며 엘리트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 MIT대 맥아피 교수는 '협업과 집단 지성'을 강조한다. '위키피디아'처럼 수많은 1명이 협업을 통해 쌓아 올린 힘도 위대하다는 것으로 혁신학교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초·중등 교육은 기업체의 신입사원 채용 정책과 명문대 신입생 모집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다. 다음 장면들은 보편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보여준다.

# 대기업 A의 신입사원 채용은 학교성적 등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팀장급 면접, 임원 면접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신과 필기 점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창의성,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역할 연기, 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을 활용.

# 대학 B는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를 우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글로벌 리더' 전형 폐지를 폐지하고 내신과 수능 상관없이 학생 역량과 잠재력 위주로 선발 예정.

대기업과 대학의 전형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초·중·고의 교육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 성적을 내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는 최하위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학교는 학생들의 경쟁을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사회는 반대로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도 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 광주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큰 그림을 속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무상급식 협약' 결렬, 시장·교육감이 나서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25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협약서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약이 결렬됐다고 한다.

광주시는 협약서에 강운태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자는 내용의 안을 내놓았지만,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양 기관이 50대50으로 분담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결렬된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이고, 모양새 또한 좋지 않다. 양 측의 입장만 살펴보다라도 감정이 묻어 나고 대립각을 세우는 막말들이 거침이 없다.

시 관계자가 "교육청 측이 마치 '노예 문서'를 요구하듯이 과도한 요구를 굽히지 않아 협약이 결렬됐다"며 "매우 황당한 경우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예의가 아니다"고 말한 사실은

대단히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 역시 "분담비율을 50대50으로 고집한 것은 타 시·도와 교육청이 체결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광주시는 분담비율을 절반씩 할 경우 당장 2012년부터 내놓아야 할 450억 원의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 교육청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라든 대화는 통해 실득이 나서고, 여의치 않으면 시장과 교육감이 만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소위 교육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자세다.

양 기관의 갈등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만 부를 뿐이다. 유해업소 단속 등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해결해야 할 행정적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양 기관의 대립 모습을 원치 않는다. 당장 시장과 교육감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지자체 불법 도로점용 방치 이유 뭐가

요즘 광주의 거리는 무법천지를 방불케 할 만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차도(車道)는 불법주차 차량이,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人道)는 인근 상가의 물건과 노점상이 점령해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치구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인데, 못하는 것인지 팔장만 끼고 있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불법 도로점용의 대표적인 곳이 서구 농성동과 남구 월산동 인근 순환도로 주변이다. 중고가전물품 업체들이 몰려 있는 이곳은 이들 업소가 각종 물품을 인도에 무질서하게 진열하는 바람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관할구청에 무단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전화가 하루에 50~70통가량 이른 것만 봐도 시민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광주시내 도로의 무질서는 이곳만이

아니다. 재래시장 등 통행이 잦은 곳은 물론 주택가 도로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점상과 불법 주차차량 및 적치물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무질서는 지자체의 방관이 주원인이다. 민원이 쏟아져도 게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경우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을 차도도 다니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오죽하면 민선 단체장들이 표의 의식해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행위와 생존권 보장은 별개의 문제다. 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불법도로 점용행위를 제대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 관할구청에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양식은 지켜야 한다.

無等鼓

'톨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도 드물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평생 가진 직업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고향인 미주리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견습 인쇄공부터 시작한 그는 미시시피강의 증기선 물길 안내원을 거쳐 광부, 기자, 사업가, 작가, 강연자, 사회 비평가 등의 직업을 가졌다.

마크 트웨인은 이 가운데 작가로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았다.

헤밍웨이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가려 "현대 미국문학은 이 작품에서 비롯

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비록 생전에는 실재했지만 사업가와 투자자로도 유명하다. 그가 남긴 "10월은 주식을 투자하기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7월과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도 그렇다"는 투자조언은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마크 트웨인

의 자서전이 사후 100년만에 출간됐다. 자서전 원고를 보관해 온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가 "최소 100년 동안은 공개하지 말라"는 마크 트웨인의 유언에 따라 그가 사망한지 100주년을 맞아 최근 책으로 낸 것이다.

무려 50만 단어를 원고지로 5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화제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자서전 출간 직전인 지난 17일 열린 소더비경매에서는 자서전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본 65쪽이 우리 돈으로 무려 2억 9000만 원에 낙찰돼 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줬다.

100년 후에 자서전

을 공개한 것이 사생활 때문인데, 요즘 말로 '신비주의 마케팅'이든, 마지막 투자에서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 분명하다. 작가와 투자자로서 모두 성공했다는 사실보다 마크 트웨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한없는 사랑과 관심이 부러울 뿐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마크 트웨인



중고칼럼

이덕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결성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핵심 논의기구로써 '경제위기의 탈출'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진행되기 이틀 전부터 5일간 'G20 도덕정치 리더십 국제회의'가 UN의 NGO단체장 63명을 초청한 가운데 우리 고장에서 치러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G20 도덕정치 리더십 국제회의"가 반가웠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도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로서 제시하셨다. 그는 20여 년의 구도 끝에, 앞으로 인류는 과학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신문명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해야만 바른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처방해주시신 것이다.

우리 시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불평등과 불신감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고

배진하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란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건물면적 33㎡(약 10평),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춘 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작은도서관은 도시의 취약한 주민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생활권 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위치나 작은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

분들이 있지만, 도서관과 공부방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공부방은 이른바 소액계층의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서관은 나이·성별·장애·계층·학습능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곳을 통해 통합과 보살핌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은 정보교육문화의 중심 거점이다. 당연히 작은도서관도 책 읽는 문화의 확산을 통해 정보 불평등 극복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에 굶주려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위

지역공동체 꿈꾸게 하는 '작은 도서관'

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도서관이 공부방과 병행하여 운영되기도 하며, 취약한 지역의 어린이·청소년·주부·직장인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굶고 있는 것은 문화'라고 할 때 그런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바는 단지 도서관 문화의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꾸리거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작지만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혹여 어떤 분들은 "작은도서관과 공부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묻는

한 터전이 됨으로써 좀더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최우선적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단위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계·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책 읽기 문화의 변화와 지역문화 발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광주 남구 의원>

빈부 격차 줄이려면 교육 양극화 해소해야

최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중·고생이 무려 2만3000명이나 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하지만 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은 6만5400여명, 급식비를 연체한 초·중·고생은 2만2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전국 학생들의 석차를 놓고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영어만큼은 2만3000등 안에 들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였다.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주요인은 교육이다.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는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 획 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